

차량 절도에 무면허 운전 기승 ‘위험한 10대들’

오토바이 훔쳐 탄 중학생 사망사고 등 호기심과 과시욕에 범죄 빈발 대형사고 우려속 상승 땀 가중처벌...10대 탈선 막을 대책 마련 시급

25일 새벽 3시 50분께 중학생 A(13)군이 광주 시 광산구 장덕동 솔무공원 인근에서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숨졌다. 무면허인 A군은 수완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배기량 279CC)를 훔쳐 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는 주인이 수납함에 스마트 키를 뒤 A군이 시동버튼을 누르자 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는 A군만 탑승했으나 절도 당시 CCTV에는 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서 도난차량을 몰던 B(15)군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에서 도난당한 차량으로 B군은 면허없이 친구에게 빌려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에는 중학교 1·2학년생 2명이 북

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인 상태로 300km를 운전하다 경북 경주시 국도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처럼 광주지역 10대 청소년들의 차량절도 및 무면허 운전이 뚜렷한 대책 없이 지속되고 있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생명을 담보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6일 순천에서도 고교생 2명이 삼산동 앞 상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였다. 호남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1대 포함 총 9대의 차량을 파손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이드미러가 잡히지 않은 차량을 몰색해 내부에 있는 스마트 키로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되는데도 호기심과 충동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청소년의 경우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청소년 무면허운전은 절도죄가 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차량 절도의 경우에도 다수가 몰려 다니는 청소년의 특성상 2명 이상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특수절도로 가중처벌 된다.

청소년 무면허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25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광주·전남 20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7년 22건, 2018년 24건, 2019년 22건, 2020년 19건, 2021년 15건으로 꾸준히 줄어든다.

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1명씩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무면허운전 방지책에 대해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차량 운전자의 차량관리와 청소년 교육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차량 절도는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면서 “공유경제가 현실화 되면서 무면허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절도 문제는 단순 무면허 교통문제가 아닌 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환해 안전운전 기본교육, 차량절도시 법적처벌 정도, 운전자의 자격·가치관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공포심도 적어 쉽게 무면허 운전을 접하게 된다”면서 “차량 도난도 차주들의 스마트키 관리부실이 한 원인인만큼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오토바이 사망사고 급증에... 광주경찰 대대적 계도·단속

최근 광주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숨진 사망자 12명 중 67%(8명)가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는 1명 감소(13명→12명) 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명이나 증가(3명→8명)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교통경찰·암행순찰대·싸이카·기동대 등 기용 인력을 총 동원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과 더불어 대대적인 이륜차 법규위반 적발을 통해 이륜차 사망사고를 예방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와 폭주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광산구 수완·신가 지구를 중심으로는 27일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청소년 교통사고와 배달업체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다는 점에서 배달업체·학교 등과 협의해 이륜차 안전교육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제동원시민모임 ‘윤 대통령 발언’ 규탄

“해괴망측한 망언” 성토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일간지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해괴망측한 망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시민모임은 이에 “단순히 과거 100년 전 일입니다. 피해자들이 엄연히 살아 두 눈 부릅뜨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판결을 이행하라는 것이 그

렇게 과하고 불편한 것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데, 사죄를 요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이성을 가진 국민이라면 당연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사력을 다해 싸워도 부족한 판에, 대통령이 나서 일본에 대해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말라니 일본이 뭐가 아쉽고 뭐가 두렵겠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병)을 비롯한 국회의원 173명은 전날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고령인 상황에서 대법원에 계류중인 특별헌금화명령 사건과 5년째 계류 중인 9건의 강제동원 배상건에 대해 이를 중분히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공사업체 협박 갈취...노조 집행부·조합원 무더기 송치

건설현장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을 트집 잡으며 협박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집행부 4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2년 동안 광주와 전남 동부권 건설현장 13곳을 돌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단체 협약비 명목으로 1억 41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노동조합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노조를 결성한 이들은 광양,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 건설

현장을 돌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현장마다 많게는 6000만원에서 적게는 2000만원까지 요구했으며,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업체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장 입구에서 방송 차량으로 극심한 집회 소음을 일으키기도 했다.

업체들은 이들이 경미한 위반사항을 촬영해 민원 신고를 하거나 불법채류 외국인 채용신고를 하면 공사기간이 연장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올머 저자먹기’로 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올바른 손 씻기 이렇게 광주시 북구청 보건소 직원들이 25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에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교육했다. 어린이들이 화면을 통해 자신의 손에 남아 있는 세균을 확인하고 있다. /4명주기자mjna@kwangju.co.kr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2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쿨존 교통 범죄와 음주·무면허 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교통 범죄 수정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치사상과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한 것이다.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도 상향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경상을 입으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장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6개월~8년까지 선고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

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까지 선고된다.

스쿨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된다. 다친 아이를 유기하고 도주하면 16년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가능하고 사망사고 후 뺑소니 시에는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도주하면 26년형까지 각각 선고된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싼
지분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신안동** **상업용지, 매매**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

문의. 010-3605-5000